

이에 앞서 3월 27일에도 만세 사건이 발생한 까닭에 내지인(內地人)들은 벌써부터 전전긍긍한 판에 또 다시 이러한 풍설로 하여 한층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재가 있고 압수된 국기와 판사 취지의 불온문서의 현존함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추어 피고의 소이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시행 전이므로 형법시행법 제2조, 형법 제10조에 의해 동 제령과 보안법의 형을 비교하건대, 보안법에 따르면 동법 제7조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며, 제령 제7호에 있어서는 동령 제1호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형기 내에서 이를 처단할 것이나, 형법 제6조에 의해 전시 보안법을 적용, 각 피고를 처단하는 바이다. 압수품은 범죄공용물로서 피고의 소유물이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이를 몰수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조선총독부 판사 궁택원야(宮澤圓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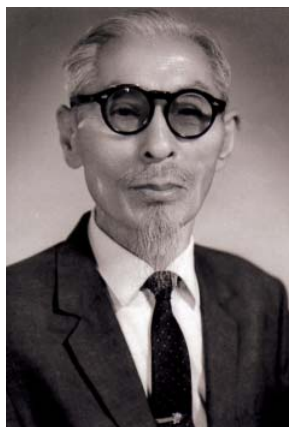


사진2-107 : 독립투사 황채현(진상면 비촌)

황채현(黃彩玆 · 1896년생)은 진상면 비촌마을 출신으로 16세되던 해에 백의회(白衣會)를 조직하여 항일사상을 고취시켰으며, 1919년 3·1운동시에 태극기를 배포하여 군민들에게 만세를 부르게 했고, 상해임시정부의 자금조달 지령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무를 수행했으며 1924년 백의회(白衣會)사건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국민훈장 애족장을 추서 하였다.

집필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재상

## 제2절 일제의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1929년 10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면서 경제공황이 세계를 강타하자 세계 각국은 자기 조건에 따라 공황극복 방향을 찾았다. 영국 · 프랑스 ·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오타와선언, 리마선언 등으로 나타난 블록경제체제를 통하여 극복 방향을 찾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들은 사회주의 통제와 개혁을 강화하여 극복해갔다. 그러나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한 후발자본주의국가인 독일·이탈리아·스페인·일본은 파쇼체제를 강화하고 식민지 수탈과 확장을 통해 공황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도, 고도의 정치기술도 갖고 있지 못하였던 일본의 지배계급은 공황에 의한 자신들의 부담을 노동자·농민·중소기업에 전가하여 위기를 회피하고자 하였으며, 군국주의의 군벌정권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하였다.<sup>1)</sup>

일본의 지배계급은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열강과의 대립·모순, 경제공황에 의한 타격 및 국내와 식민지에 있어서 반제투쟁의 고양으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침략전쟁에 돌입하였다. 이는 새로운 시장을 구하려는 독점자본의 이해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사회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일본군부의 의도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1931년 9월에 만주를 침략하고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1941년 12월에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1945년 8월 패망하기까지 15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였다. 이 기간을 넓은 의미에서의 전시체제기라 부른다.

일제 식민통치의 본질은 수탈과 민족말살에 있었다. 침략전쟁을 도발한 이후 일제가 추진한 식민지 정책 중 하나는 조선인들의 활동 전반을 철저히 통제하는 일이었다. 대륙침략을 위해서는 조선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바탕 위에 전시체제를 강조하면서 전쟁수행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대륙침략을 감행하면서 일제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식민지 경제수탈을 극대화한 것도 한민족의 저항력(물적 기반)을 박탈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인력을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동원하였다.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여 소작료통제령, 임금통제령, 직업이동방지령을 만들어 농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봉쇄하였고, 금속회수령으로 밥그릇도 빼앗아갔다.<sup>2)</sup> 조선의 경제체제를 군수공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속·기계·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식량과 물자에 대한 강제 공출도 시행되었다. 일제는 군량확보가 시급해

1) 趙東杰, 『日帝下 韓國農民運動史』, 1979. 한길사, 236쪽.



사진2-108 : 깃발을 들고 정렬한 소년지원병들. 어린소년들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에 동원되었다.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 2002, 379쪽.



일제의 만주침략은 군정과 민정의 양립 속에 감행된 전쟁으로, 조선에는 준전시체제로서의 식민통치가 가해졌다.

지자 미곡증식계획을 재개하는 한편, 농민들에게는 식량배급제도와 미곡 공출제도를 시행하였다. 1939년 10월 30일에 전라남도 도령(道令) 제33호로 발표된 백미취체규칙(白米取締規則)은 그들이 식량확보에 혈안이 되어 얼마나 조선농민들을 괴롭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해방되던 해 8월에 광양서초등학교 사진을 보면 운동장 일부가 콩밭으로 가꾸어져 있는데, 전쟁이 계속되면서 일제가 식량확보에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광양지역의 극심한 식량부족현상도 보여준다. 전쟁말기 식량확보에 혈안이 된 일제로부터 조선인들이 얼마나 격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잘 보여준다.

일제의 만주침략은 군정과 민정의 양립 속에 감행된 전쟁으로, 조선에는 준전시체제로서의 식민통치가 가해졌다. 일제는 독점자본의 수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조선을 중국침략전쟁의 전진기지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후 1945년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중에게는 유례 없는 빈곤과 무권리상태가 강요되었다.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와 본격적인 자본수출 그리고 군수산업체제를 주축으로 한 파행적인 식민지 조선공업의 도출, 그리고 전쟁말기의 경제수탈 및 인적자원의 강제동원이 자행되었다.



사진2-109 : 1938년 광양공립 보통학교 학생군대 제식훈련

전시체제로 강화된 일제의 식민통치에 조선인들의 민족해방운동이 고조되자, 일제는 파쇼지배정책을 구사하여 군대와 경찰을 증원하면서 조선인을 철저히 탄압하였고 아울러 각종 악법을 강화하여 조선인의 저항을 단속하였다. 1934년에는 치안유지법을 다시 개악하였으며, 1936년에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실시하여 대부분 항일운동 관련자인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장기간 구금 감시하였다. 1937년에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만들어 지식인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1938년에는 공산주의사상과 그 운동을 박멸하고 일본정신을 고양한다는 취지로 조선방공협회를 만들어 조선인의 민족해방운동을 근원적으로 막고자 하였다.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23만명의 군대와 3만 5천여 명의 경찰이 조선인을 통제하였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군사독재적 탄압이 가중되는 가운데 조선민족은 국내의 여러 분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전국 각지에서 농민조합, 노동조합, 학생조직 등의 대중운동 조직들이 비밀지하

조직으로 결성되었으며, 운동노선은 종래의 경제투쟁 차원을 넘어 주로 식민통치기관에 직접 대항하는 정치투쟁을 벌였다.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인 것은 농민운동이었다. 세계적인 공황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민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더욱이 일제와 지주, 자본가가 공황으로 입은 손해를 농민들에 대한 수탈로 보상하고자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는 더욱 심각하였다. 만주를 침공한 일제는 침략전쟁의 비용까지 조선민중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조선을 대륙 침략의 후방기지로 만들고자 반일세력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제 농민에게는 완전한 몰락이나, 목숨을 내건 투쟁이냐의 두 가지 선택만이 남게 되었다. 경제적 한계상황은 민족해방운동의 고양, 민중의 민족적 각성 등과 결부되어 소작쟁의, 노동쟁의의 형태를 통한 생존권 투쟁이 가열 차게 전개되었다.

심각한 농촌경제의 몰락은 빈농들의 불만과 저항을 야기하였고 식민지체제의 위협적 요인으로 대두하였다. 1920년대에 소작쟁의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고율 소작료에 대한 소작료 인하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중반기로 가면서 소작권 이동에 대한 항거로 나타났고 또 조직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1920년대 말기에는 보다 격렬한 항쟁상을 보이면서 식민체제의 근원을 흔드는 민중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는 1932년에 조선소작조정령을, 1934년에는 조선농지령을 공포하고 격화되어가는 소작쟁의를 봉쇄해 보려고 했다. 이러한 식민성 농촌 구조 속에서 전개된 소작쟁의는 두 갈래의 양상을 보였다. 하나는 종래의 집단적 소작쟁의를 발전시켜 간 것인데 이것은 적색 농조의 소작쟁의로 지목되어 있는 것이 특별히 부각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집단적 소작쟁의 외의 모든 쟁의를 묶는 것인데 여기에는 소작조정령에 따른 쟁의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sup>3)</sup>

1930년대 전남지방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강진,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무안, 보성, 순천, 여수,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해남 등에서 일어났다.<sup>4)</sup> 그러나 그것은 활동 초기 혹은 혁명적 농조의 결성 준비 단계에 조직이 드러나 대량 검거당함으로써 어느 하나 혁명적 농조의 완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더욱이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조직적인 농민운동은 극도로 왜소화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의 집중적인 탄압과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운동 내부의 사정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였다.

전라남도는 토지가 비옥하고 들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인구가 232만명이나 되어 조선에서 2위였고, 전라도는 조선의 평균 인구밀도

3) 趙東杰, 앞의 책, 264쪽.

4) 『全羅南道誌』제8권, 1993. 全羅南道誌編纂委員會, 255쪽; 지수결, <1930년대 조선의 농민조합운동 연구 - 특히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중심으로->, 199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1-102쪽

가 99명이었는데 그것의 2배나 되었다. 1931년판 『全羅南道事情誌』에 의하면 전남에는 23개 군에 2,320,599명이 살고 있었으니 1개 군 평균 거주 인구는 10만명 정도이다. 당시 광양에는 473명의 일본인, 58,352명의 조선인 등 58,82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인구수로는 작은 군이었다. 다음의 <표2-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1년 58,825명의 인구수는 1942년 67,104명을 기록하여 약 8,200명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약 700명이 증가하였다. 전시체제가 광양 거주 일본인은 광양 전체 인구의 1%에 미치지 못하는 500명 안팎이 거주하였는데, 대개 행정관서 직원이거나 농장·광산의 소유주로서 민족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풍족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표2-33> 전시체제하 광양군의 인구 현황

연도	합계				조선인				일본인				만주인 및 중화민국인			
	戶數	인구수			戶數	인구수			戶數	인구수			戶數	인구수		
		총수	남자	여자		총수	남자	여자		총수	남자	여자		총수	남자	여자
1931	10,964	58,825	30,014	28,811	10,844	58,352	29,776	28,576	120	473	238	235	0	0	0	0
	11,413				11,278				135							
1932	11,212	59,870	30,385	29,485	11,083	59,368	30,119	29,249	127	493	261	232	2	9	5	4
	11,691				11,554				135							
1933	11,791	59,164	30,024	29,140	11,655	58,658	29,757	28,901	133	496	257	239	3	10	10	0
1934	11,743	59,401	30,055	29,346	11,598	58,892	29,787	29,105	142	501	260	241	3	8	8	0
1935	11,788	59,812	30,200	29,612	11,656	59,341	29,958	29,383	129	462	233	229	3	9	9	0
1936	11,779	60,266	30,486	29,780	11,641	59,758	30,210	29,548	135	495	265	230	3	13	11	2
1937	11,780	60,644	30,697	29,947	11,641	60,126	30,436	29,690	138	517	260	257	1	1	1	0
1938	11,703	61,304	30,961	30,343	11,565	60,783	30,691	30,692	136	517	268	249	1	1	1	0
1939	11,703	61,304	30,961	30,343	11,565	60,783	30,691	30,692	136	517	268	249	2	4	2	2
1940	11,737	61,990	31,003	30,987	11,585	61,468	30,727	30,741	150	510	266	244	2	12	10	2
1941	11,851	63,076	31,709	31,367	11,710	62,585	31,456	31,129	138	475	243	232	3	16	10	6
1942	12,219	67,104	33,900	33,204	12,073	66,558	33,627	32,931	144	534	266	268	2	12	7	5

\*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1년-1942년.

\* 비교 : ① 1931년과 1932년의 호수는 住居와 世代로 구분되어 있다.

② 1938년과 1939년의 수치가 같은데 이는 1939년에는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한편 경제적인 상황을 비교해보면 1933년 광양 거주 조선인과 일본인은 인구수에서 130 : 1이었으나 세금액은 1 : 9를 보였고, 토지소유면적은 1 : 7로 경제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1933년에는 전남 일대의 호우로 농작물 피해액이 40만원에 달하였는데 그 중 광양과 담양의 피해가 특히 심하였다.<sup>5)</sup> 또한 시간이 갈수록 소(小)지주는 격감하였는데 대지주는 격증하여 토지점병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5) 『朝鮮日報』·『中央日報』  
1933년 8월 6일자.



광양에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1940년에 전국적으로 소수의 지주들이 소유하는 농경지는 전면적의 58.7%인데 반하여 자작농과 소작농의 소유는 42.2%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경제규모에 있어서는 1정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경영농가가 전농가호수의 72.1%를 차지하였다.<sup>6)</sup>

광양에서도 소유지 확보와 증가를 위해 간척지 매립이 행해졌다. 1932년 9월 28일에 인덕면(仁德面) 간척지 매립이 이윤용(李允用) 등 3명에게 허가되었다.<sup>7)</sup> 또한 1942년 4월 10일 골약면(骨若面) 마동리(馬洞里)의 우석(于瀉) 33,053평이 일본 북강현(福岡縣) 대정복시(大町福市)에 의해 전답으로 매립 준공되었다.<sup>8)</sup>

1930년대에는 노동쟁의가 고양되어 1930년대 전반기에는 연 150-200건의 노동쟁의에 12,000-18,000명이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노동자의 요구조건은 임금인상, 임금인하 반대, 대우개선 순위였다.<sup>9)</sup>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상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다음의 자료(1929년)는 당시 광산노동자의 참상을 잘 말해준다. “한국인 광부생활은 노동에 비하여 별로 임금상의 특전이 없는 데다가 가장 위험한 성질을 가진 직업이라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과거 수년의 통계를 보면 광부 1만인에 대해 매년 사망자 25-30명, 중상자 90-100명, 경상자 1,300여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에 달한다. 그러나 광부에 대한 대우는 직무에 기인한 부상으로 노동치 못하면 일급액(日給額)의 5할 내지 8할 정도로 최대한 90일 이내에 한하여 지급하고 죽으면 장제료(葬祭料) 10원 내지 15원,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50원 내지 150원을 지급할 뿐이다.”<sup>10)</sup> 1개월간의 공휴일수가 전혀 없는 광산이 44.1%, 노동자수는 38.1%였으며, 하루의 노동시간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혹사시킨 광산이 1.9%, 노동자수는 2.5%였으니 광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짐작된다.<sup>11)</sup> 이러한 참혹한 여건에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던 당시의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간에 어떤 형태로든 단결이 요청되었고 그 결과 3·1운동 직후인 1921년부터 각종 형태의 노동단체가 도처에서 급격히 결성되었다.

광양에서도 광산 개발로 광산노동자수가 증가하였고 일제의 강압적인 착취에 광산노동자들의 쟁의가 빈발하였다. 광산의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보수에 불만을 품고 노동자들이 행동으로 광산자본가들에 대항하였다. 1932년 1월 12일 광양의 금광광부 890명이 임금감하(賃金減下)에 반대하여 동맹파업하였고,<sup>12)</sup> 1934년 3월 8일에는 광양 금산의 광부 20여 명이

6) 朝鮮銀行調査部 編, 『朝鮮經濟年報』, 1948. 27-28쪽.

7) 『朝鮮總督府官報』1932년 10월 2일자.

8) 『朝鮮總督府官報』1942년 4월 15일자.

9) 金雲泰,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統治』(改訂版), 1998. 博英社, 669쪽.

10) 『東亞日報』1929년 7월 19일자.

11) 朝鮮總督府, 『工場及鑛山に於ける勞動狀況調査』: 姜東鎮, 『일제지배하의 한국노동자의 생활상』, 『한국근대사론』III, 204-205쪽.

- 12) “전남 광양 금광의 광부 400명 罷罷, 임금 減下에 반대, 전라남도 광양 금광 광부 900명은 12일부터 임금감하에 반대하여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13일에 이르러 그 나머지 490명이 맹휴에 가담하여 광부 전부가 890명이 완전히 맹파중이다. 경성에 있는 광산장 반소(飯沼)씨는 광산으로 급행하였다.”(『東亞日報』1932년 1월 14일자)
- 13) 1934년 3월 8일자『朝鮮日報』·『東亞日報』·『中央日報』.
- 14) 『東亞日報』1936년 3월 27일자.
- 15) “광양광산 파업단 경찰에서 주동자 검거, 조선에서 제3위에 간다는 전남 광양군 초남광산의 인부 600여 명은 시간연장을 반대하고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함은 이미 누차 보도한 바이니와 지난 26일 오전 10시에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광산인부 수백명이 경찰서를 향하여 오던 중 이 소식을 접한 동서에서는 금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정케 하였으므로 1구 2명씩의 대표가 시장을 방문하고 시간은 종래와 같이 8시간으로 할 것과 대우를 개선하여 줄 것 등을 함께 진정 결과 동 서장은 가급적 알선하여 원만한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다.”(『東亞日報』1936년 3월 29일자)
- 16) 『朝鮮日報』·『東亞日報』1936년 3월 30일자 및 4월 3일자.
- 17) 『東亞日報』1936년 7월 29일자.
- 18) 光陽郡誌編纂委員會, 『光陽郡誌』, 1983, 329쪽
- 19) 『朝鮮日報』·『中央日報』1933년 9월 12일자.
- 20) 『東亞日報』1934년 9월 1일자.
- 21) 『朝鮮日報』·『中央日報』1935년 7월 10일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동맹파업하였으며,<sup>13)</sup> 1936년 3월 26일에는 광양군 초남(草南)광산의 광부들이 동맹파업하였다.<sup>14)</sup> 특히 조선에서 제3위였다는 초남광산의 경우는 광부 600여 명이 노동시간 연장에 항의하여 동맹파업을 단행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주동자를 검거하기에 이르렀다.<sup>15)</sup> 동맹파업한 광부들은 해고당하였으나 곧 모두 복직되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등으로 동맹파업사건은 마무리되었다.<sup>16)</sup> 초남광산에서는 그후에도 동료가 부당하게 해고되면 동맹파업으로 항거하였다.<sup>17)</sup> 이러한 노동운동이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으로 전개된 것은 그들의 처지가 개선되면 일제의 타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지배하에 있는 한 노동조건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고 노동자의 투쟁 역시 근절될 수 없는 문제였다.<sup>18)</sup>

한편 일제의 탄압과 검속으로 청년회 조직이 거의 자취를 감추던 1933년에 40여 명의 청년들이 비밀결사의 혐의로 검거되었고,<sup>19)</sup> 1934년에는 반제투쟁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광양청년회 대표 12명이 조직한 독서회가 조직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일경에 검거되었다.<sup>20)</sup>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전남노동협 사건이라 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계모임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회원들이 광양 금광에 광부로 들어가 금광 파업에 역할을 한 것이라 보도하였다.<sup>21)</sup> 이 사건으로 광양청년 100여 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는 광양독서회의 비밀조직의 규모를 추측하게 하여 준다. 1935년 7월 19일자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소화 9년 刑公슴 제 54호」의 판결문은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잘 말해준다.<sup>22)</sup> 이 검거로 10명이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실형을 받았는데 박영진(朴永震, 37세), 박경래(朴炯來, 23세), 김지태(金誌泰, 25세), 정학규(鄭學奎, 24세), 박기동(朴基棟, 22세), 박준오(朴準午, 28세), 박봉두(朴鳳斗, 21세), 김갑곤(金甲坤, 29세), 김희곤(金希坤, 21세, 김갑곤의 동생), 김주환(金周濶, 32세)이 그들이다. 이들 중 박영진·박경래·김지태·정학규·김주환은 각각 징역 2년, 박기동·박준오·박봉두·김갑곤·김희곤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각기 5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김희곤은 전남경찰



사진2-110 : 옛 초남광산

국 특별고등과 진(陳) 순사부장의 혹독한 고문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 출감한 후 사망하기도 하였다.<sup>23)</sup>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1945년 패전까지 일제는 조선지배정책은 조선의 총체적 해체와 완전한 일본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골적인 민족말살정책이었다. 민족말살은 일본 식민주의의 특질이었다. 한국적인 모든 것의 파괴, 해체를 의미하였다. 민족적·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 혈연·지역의 공동체적 통합성, 한민족의 생물학적 특질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이었다.<sup>24)</sup> 결국 한국 민족말살의 본질은 일본의 천황제 국가체제에의 노예적 편입이었다.

1910년 강점 이후 일제는 조선민족에 대하여 그 존재를 말살하고 일본 천황에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하면서 천황의 조서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지배할 것을 천명하였고, 강제적으로 체결한 병합조약에서는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 양도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지연장주의, 내선융화, 내선일체화, 황국신민화 등을 표방하면서 조선을 통치하여 갔다. 이것은 곧 ‘조선인의 일본인화’, ‘조선의 일본화’를 통하여 한반도를 일본의 한 지역으로 편입시켜 조선을 영원히 지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일제의 식민주의는 조선민족 말살을 통한 영토확장주의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제국주의국가들이 식민지 민족에 대한 동화를 획책한 경우는 일본제국주의뿐이었다. 동화란 조선인을 일본에 흡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민족이란 정치·경제는 망해도 문화의 기능을 통해 존속하기 때문에 식민지 속에서도 견재한다. 그러므로 식민지시기의 민족문화는 민족보존의 영양소 구실을 했다. 따라서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의 문화를 파괴해갔다. 민족동화정책은 1910년 테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부임하면서 일시동인(一視同仁)이란 구호로 식민문화를 통하여 추진되었는데, 1931년 일본이 만주까지 정복한 다음에는 조선을 완전하게 통제할 것을 획책하여 식민문화에 그치지 않고 식민통치 전반에 걸쳐 민족말살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 만주에서는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들고 나왔다.<sup>26)</sup>

1930년대에는 침략전쟁의 개시에 따른 인적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하였다. 1931

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4(대중투쟁사자료집), 1978, 263쪽.

23) 『光陽郡誌』, 335-336쪽.

24) 강창일,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질」, 『한국사』17, 2001, 국사편찬위원회, 102쪽의 각주 5.

25) 강창일, 앞의 논문, 101-102쪽.

26) 金泰國, 「滿洲地域 朝鮮人民會 研究」, 2002,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40쪽.



27) 『朝鮮年鑑』, 1945년도판.  
京城日報社, 28쪽.

년 만주침략 직후 육군대신에서 조선총독으로 자리를 바꾼 육군대장 우가키 가즈스케(宇垣一成)는 ‘내선융화’를 표방하면서 종래의 민족개량화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조선군사령관과 육군대신을 거쳐 관동군사령관을 역임한 후 1936년 8월에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南次郎, 1936-1942 재임)는 최고이념으로 ‘내선일체화’를 내걸어 ‘물심양면에 걸쳐서 반도민중을 황민화하고 반도를 완전한 황토(皇土)이게끔’ 하는 철저한 한민족말살정책을 시행하였다.<sup>27)</sup> 미나미는 1937년 4월의 제2차 도지사회에서 국체명징(國體明徵), 만선일여(鮮滿一如), 교학진작(敎學振作), 농공병진(農工並進), 서정쇄신(庶政刷新)의 이른바 5대 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는 보다 철저하게 민족말살, 황민화정책이 추진되었다. 황국신민화정책의 특징은 ‘천황 신앙’의 강제를 축으로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빼앗아 한민족의 민족성 말살을 단기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더 황포스럽게 강권을 발동하여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침략전쟁 수행에 투입하였다. 중일전쟁 개시 후 조선의 대륙병참기지화정책에 의거하여 ‘시국대책조사회’(1938년 8월)을 개설하였는데, 자문사항 제1의제인 ‘내선일체의 강화·철저에 관한 건’에 대한 답서의 첫머리에 “조선통치의 근본은, 반도의 동포로 하여금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에 기초한 광대무변한 황택(皇澤)을 입게 하여 명실공히 완전한 황국신민화를 도모하되 조그만치의 간격도 없는 내선일체를 조성하고(중략) 능히 제국의 대륙경영의 병참기지로써의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나아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조국(肇國)의 대정신을 현현하는데 있다.(중략) 이를 위해서는(중략)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 위의 정신을 꾸준히 배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므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가급적 빠른 보급을 꾀하여 국체명징·내선일체·인고단련의 3대 교육방침을 전달해서 황국신민의 육성을 기약해야 한다”고 한 것에서 일제의 철저한 민족말살정책의 방침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민중에 대하여도 더욱 국체관념을 명징시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철저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실천화를 꾀하여 생활의 합리화, 풍속의 융화, 기타 각 생활부분에 걸쳐 황국신민화를 목표로 시행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sup>28)</sup>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패전까지의 전시강제동원기는 조선의 총체적 해

28)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1986, 청아출판사, 374쪽.

체와 완전한 일본화를 목적으로 완전한 민족말살정책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총체적인 민족말살정책을 전개하여 모든 영역에서 ‘전통’과 ‘민족’을 해체시켜 나갔다. 한민족말살은 1) 국민정신총동원운동(→국민총력운동), 2) 황국신민의 서사와 일본어의 강요, 3)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강요, 4) 황민화교육의 강요, 5) 한국사의 왜곡과 말살, 6) 농촌재편성 정책의 시도 등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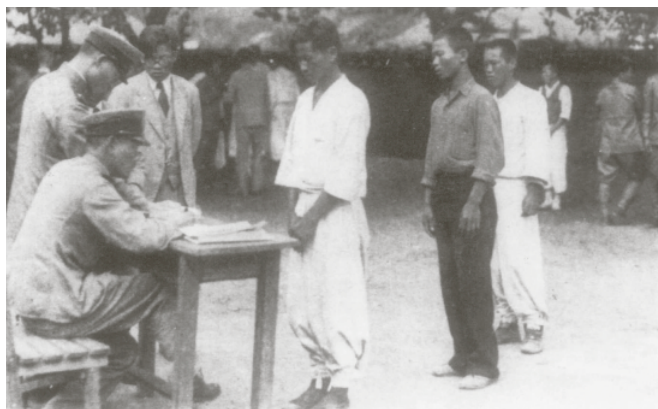


사진2-111 : 일본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강제연행 대상자들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하여 1937년에 1면 1신사의 설치를 추진하였고, 각종의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도록 강요하였다. 신사참배는 천조대신(天照大神), 명치대황(明治大皇)을 제신(祭神)으로 하는 조선신사를 설립하여 조선인을 신도(神道)로서 지배하려는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민족말살정책이었다. 조선을 디딤돌로 중국대륙침략전쟁을 수행하고자 하였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조선인들의 맹렬한 항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조선의 완전한 복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조선인들의 정신지배에 주력하게 되었고, 그것은 신사참배 강요로 나타났다. 독점자본과 관료가 결탁한 군국주의자들은 천황중심주의, 황도(皇道)주의, 국체명징(國體明徵)을 이념으로 내걸고 이를 현재화하는 거점으로 신사숭경(神社崇敬)을 창도하여 신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신도의식의 참여와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이다. 대륙침략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선에서 신사참배는 더욱 요구되었다.<sup>29)</sup>

1937년 10월에 제정된 황국신민의 서사의 내용은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忍苦鍛鍊)이었다. 조선인들을 소위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이를 되풀이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폭력을 가했으며 조선인을 일제를 위해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획일적 예민(隸民)의 박제(剝製)로까지 만들 셈이었던 것이다.<sup>30)</sup> 천황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종교체계에 조선인을 세뇌시켜 포섭하기 위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민족말살정책이었다.

일본어에 의한 교육, 사상통제의 강화, 전쟁에의 협력, 황국신민의 단련

29)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2001. 京仁文化社, 256쪽.

30) 신일철, 「일제의 한국문화 침탈의 기초」, 『신동아』 1971년 7월호, 342-343쪽.

강화 등에 중점이 두어진 황민화교육도 조선민족말살을 위한 정책이었다. ‘충량한 황국신민 육성’을 위하여 1938년 3월에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학교의 명칭, 교육의 내용 등을 일본인 학교와 똑같이 하고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내선일체화 방침에 의해 국체명징·내선일체·인고단련을 조선교육의 3대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제하여 언어공동체로서의 조선민족을 해체한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민족말살이었다. 국체명징은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하고 군신일체, 충효일본의 국체, 만세일계의 황통을 절대부동으로 하는 국체관념을 전 국민에 대해 확고하게 배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천황·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을 지도정신으로 하며, 내선일체는 “역사적 관계에 밀접하여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신애협력의 정신이며 국가에의 헌신·희생의 정신”이고, 인고단련은 헌신보국의 정신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인내하고 목적을 관철하는 것이라 주장했다.<sup>31)</sup> 황민화교육은 개인주의·자유주의·공산주의 사상을 배제하고 또한 민족독립사상 운동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31) 朴慶植. 앞의 책. 392-394쪽.

창씨개명도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이었다. 1939년 11월에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조선민족 고유의 성명제를 폐지하고 일본식의 씨명제를 설정하였다. 조선민족에게 성(姓) 관념은 언어나 종교 혹은 지연성보다도 더욱 중시되는 민족구성원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그런데 이 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새롭게 일본의 가족주의의 씨(氏) 제도를 강제한 것은 혈통주의에 의한 민족공동체로서의 조선을 해체하여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국가체제 속에 최하위 말단계급으로 조선인을 편입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민족말살정책이었다. 그들은 폐성탈명을 단행하면서 민사령 개정, 호적개정, 서양자(婿養子)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전통적 가족제도를 파괴하였다. 또한 조선민중의 노동력동원과 징병 등 군사상의 목적에 이용하였다.<sup>32)</sup>

32) 朴慶植. 앞의 책. 388쪽.

한국사의 왜곡·말살도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인 학자들 대부분은 조선민족의 열등성, 후진성 즉 정체성을 입증하는 데 학구적 열정을 집중하고, 특히 상고시대의 한민족의 신화·전통을 왜곡하여 한국지배론 등을 거론하면서 일제의 한민족 동화정책과 한국지배를 합리화시키는데 급급하였다. 또한 한국은 상고시대 이래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소위 조공을 바쳐온 부용국(附庸國)으로 문화·사상면에서 독

자의 합법칙성과 주체성을 부정하였다. 한편 조선인의 성격을 부화뇌동을 즐기고 당쟁으로 허송세월하며 민족적 단결심이 없는 것으로 민족성을 왜곡하는가 하면 독립·애국심이 없으므로 조선인은 일제의 지배하에서 만족하게 생각하고 행복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sup>33)</sup> 또한 조선의 관습과 문화를 파괴, 해체하면서 일본화시켜 나갔다.

‘통혼장려’라는 혼혈정책을 권력적 차원에서 입안, 전개한 것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민족말살정책이었다. 완전한 내선일체화의 최종적 완결책으로서 혼혈정책은 ‘조선의 황토화(黃土化)’를 목적으로 하는 혼거(混居)정책과 함께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일전쟁 이후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남성감소와 상대적 여성과잉의 현상에 대응한 일본인 여성구제의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일본화’를 통한 민족말살정책은 조선인을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로서 강제 연행하여 전쟁소모품화함으로써 민족학살적인 말살책을 취하였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유리시켜 비자립적 개인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34)</sup>

군수물자와 인력이 부족하였던 일제는 1938년 4월 1일에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를 공포하였고 칙령 제316호에 의거하여 같은 해 5월 5일부터 조선에서 시행하여 일본을 위한 침략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통제하였는데 1938년 이후에 발표된 전시하의 모든 명령과 규칙은 이 국가총동원법을 모법(母法)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징용령, 가격통제령, 조선징병령, 식량관리령, 농지관리령, 소작통제령 등을 발표하면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징용, 징발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감행하고 공출의 이름으로 농산물을 빼앗아 갔다. 학교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바꿀 수 있었다.<sup>35)</sup>

전시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조직 가운데 대표적인 단체가 1938년 7월에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었다. 일본에서 1937년 10월에 국민정신총동원중앙연맹이 결성된 다음해 7월에 조선총독부학무국이 중심이 되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발족되었다. 조선에서 총동원운동의 목표는 첫째로,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통한 내선일체, 둘째는 일제의 전시 국책사업에의 협력, 셋째는 조직과 훈련을 통한 전시체제의 확립이 그 목적이었다.<sup>36)</sup>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중국침략전쟁에 대처하고 국가총력전에 대비하여 국민운동의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선전의 필요로부터 ‘거국일치’, ‘진

33) 金雲泰, 앞의 책, 634쪽.

34) 강창일, 「일제의 조선지배정책과 군사동원」, 『일제 식민지정책 연구논문집』, 1995.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148-149쪽 ; 강창일, 「식민지 지배체제의 특질」, 109-110쪽.

35) 趙東杰, 앞의 책, 285쪽.

36) 윤선자, 앞의 책, 287쪽.

충보국',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조선연맹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단위인 도·부군도(府郡島)·읍면(邑面)·정동리(丁洞里) 연맹 등의 지방연맹과 관공서·학교·회사·은행·금융조합·공장·상점 등의 각종 연맹이 조직되었고, 그 아래에 애국반이 조직되었다. 애국반은 일반 반원과 호(戶)대표 반원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1942년 4월 1일 현재 26만여 반원에 호대표 반원수는 4백 47만 8천 9백 49명이었다.<sup>37)</sup> 세대주가 반원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거의 모든 조선민중을 조직한 셈이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행정기구와 일체가 된 '통치의 보익기관' 적 전국적 조직으로 '직역봉공(職域奉公)을 주안으로 하는 황국신민화의 실천운동'으로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던 농촌·어촌·산촌의 진흥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진흥회는 경제운동조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정신운동조직으로 전시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농어산촌운동이 농촌위기에 대응할 농촌 구제·재편성이라는 문제였던 것에 대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일체의 전쟁정책에 협력케 할 체제를 만들도록 한민족에게 강제하고 보다 수탈을 하기 위한 제입법 제기구를 정비하여 간 운동과 정책이었다. 1940년에는 전시체제의 근간 조직이 일원화되었다. 즉 국민총력연맹으로 종래의 농촌진흥회와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통합하고 또 종래의 행정조직과 중복되어 있던 것이 소위 전국민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연맹은 애국반을 기저 조직으로 하여 매일 조회 때 궁성요배와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케 하고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정해 국기 게양과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정기 반상회를 통해 일장기 게양·일본어 상용·방공방첩·애국저금 등을 강요했고, 일본정신 발양주간·근로보국주간·저축보국주간 등을 만들어 국민감정을 전쟁터로 몰아갔다. 또한 조선농민의 몰락이 일체의 농민수탈과 금융독점자본 및 지주의 수탈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게으름, 낭비벽, 무식함에 있다고 선전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이듬해인 1942년 3월말경에 각 부(府), 군(郡), 읍민(邑民) 및 단체구성원들로부터 소위 현금형식으로 일본군용기 및 각종 병기제작기금(兵器製作基金)을 거두었다. 이때 일본군 관계기관에 거두어진 광양지역의 현금액은 8만원에 달하였는데<sup>38)</sup> 당시 광양의 조선인은 12,073호에 66,558명이었다.

37) 京城日報社, 『朝鮮年鑑』, 1943, 499쪽.

38) 『毎日申報』 1942년 3월 6일, 8일, 10일, 11일, 12일, 18일, 19일, 26일, 27일, 30일, 4월 2일자.



태평양전쟁의 개시로 침략전쟁이 더욱 확대되기 시작한 전후의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대한 지배방침을 새롭게 강구하였다. 즉 국민총력운동을 철저히 하고 황국신민화의 강화, 만주개척정책에의 협력을 통한 선만일여의 철저, 생산력 확충계획으로서 특히 전시식량대책, 중요광물증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공업의 진흥, 물자동원계획, 물가통제, 국민저축의 장려·강화 등 전시경제체제의 강화 및 노무동원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일제는 물자뿐 아니라 사람도 동원수단으로 이용했다.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을 공포하고 같은 해 4월부터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전력을 보다 강화, 보충하기 위하여 1943년 7월 해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전문학교 대학 재학생의 학도지원병 약 4,500여 명을 강제 연행하여 1938년부터 1943년까지 23,681명의 지원병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또한 1944년 4월에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1944-1945년에 육·해군 합계 209,279명의 조선청년을 강제적으로 전선으로 내몰았다.<sup>39)</sup>

한편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 개시에 의한 조선의 ‘대륙전진병참기지화’ 정책하에서 군사공업설비의 개시와 함께 조선민중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세워졌다. 일제는 국민징용령을 제정하여 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국민징용령은 1939년에 공포되었는데 조선에서는 노동력 조달 자체가 일본보다 급하지 않았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전면적인 실시는 되지 않다가 1941년부터 군에 징용되기 시작하였고, 1944년 10월부터는 국민징용의 일반적 적용이 시작되었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한 요신고자는 1944년 당시 조선에서는 일정 기능자를 제외하고는 12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가 해당되었고 여자는 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때 징용에 응하지 않는 자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1944년 8월에는 ‘여자정신대 근로령’을 공포하고 수십만에 달하는 12-40세의 미혼의 조선 여성을 동원하여 일본·조선 내의 군수공장에 또 알리지 않은 채 남방과 중국전선

39) 朴慶植, 앞의 책, 353-3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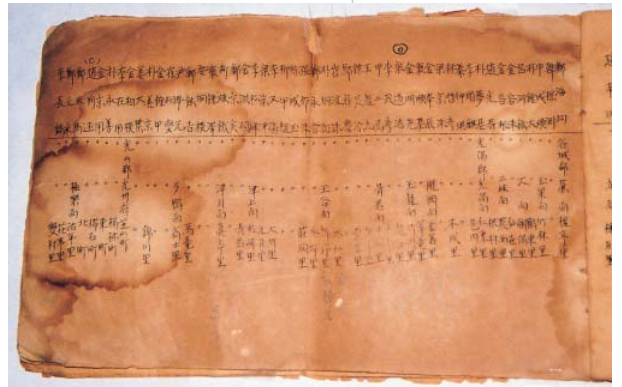


사진2-112 : 강제 징용자 명단 (광양출신 인물 일부)



사진2-113 : 강제 징용자가 가슴에 달았던 명패

40) 경기도사편찬위원회『경기도 역사와 문화』1997. 326쪽

41) 朴慶植, 앞의 책. 360쪽의 <표 5>.

42) 『光陽郡誌』. 18쪽 화보판.

에 위안부로 연행하였다. 강제연행된 조선인은 광산, 발전소, 도로공사장, 군사기지 공사장 등에 노동자나 포로감시원, 군위안부 등이 되어 살인적인 착취와 학대에 시달렸다. 1939년 이후 일제가 강제연행해 간 인원은 한반도 내 480만명, 일본열도에 152만명, 군대원(군속 등)으로 20-30만명, 군 위안부 14만명 등 총 700여 만명에 달하였다. 조선인구의 1/3 이상이 노예로 끌려간 것이다.<sup>40)</sup>

강제동원을 위해 일제는 지역유지와 지방관리, 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였다. 모집, 징용, 근로보국대, 근로동원, 위안부 등의 명목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은 탄광, 금속광산, 토건공사장, 군수공장, 발전소, 비행장 건설 등에 투입되었는데 1939-1945년의 합계가 약 480만명이었다.<sup>41)</sup>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5년 3월에 강제 징용당한 봉강면(鳳岡面) 거주 윤태봉(尹泰鳳)의 출정 사진은 당시 급박하고 처절하였던 조선인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게 해준다.<sup>42)</sup>

민족말살의 식민통치방침은 전시체제의 강요와 함께 감행되었으므로 조선인은 이중적 강압 속에서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조선인의 항거는 계속되었고 그러한 현상은 광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38년 6월에 일제의 탄압으로 노산 이은상이 광양의 백운산 아래 은거하였다가 1942년 10월에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홍원경찰서 및 함흥감옥에 구금당하였다. 그 후 풀려난 그는 다시 1945년 1월에 사상예비검속당하여 광양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출옥하였다.

1941년 3월에는 광양광업소(光陽鑛業所)에 근무하던 광양 출신의 김채룡(金彩龍)·김원주(金源柱)·오호영(吳浩榮) 등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뜻을 모으고 비밀결사 백의회(白衣會)를 조직하였다. 김채룡은 1941년 8월에 일본 교토(京都) 기독교청년회의 야간 중학부에 진학한 뒤 10여 명의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국내 동지들과 서신을 교환하다 1941년 말에 교토 굴천(掘川)경찰서에 피체되었다. 1942년 11월 27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sup>43)</sup>

1943년 2월에는 일본 동경(東京)의 일본대학(日本大學) 예술부에 재학 중이던 광양 출신의 장세영(張世永, 일명 張志永)이 동지들과 모임을 갖고



사진2-114 : 봉강면 거주 윤태봉의 출정모습

43) 判決文(1942년 11월 27일. 全州地方法院).

태평양전쟁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항일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을 근거로 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민중들을 지도·계몽하는 한편 일제가 소련과 개전(開戰)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호기로 삼아 재미(在美) 독립운동가 및 재일(在日) 조선인 학생들과 연계, 일제히 봉기하여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모집을 위해 그는 동경 거주 외국인들과 교섭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장세영은 1944년 8월 1일 오사카(大觀) 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sup>44)</sup>

그러나 민족말살정책은 전시체제가 일제의 국가시책이었으므로 한민족의 수난은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 한민족 보존의 이론적 근거가 억눌리고 조선인의 독자성이나 민족적 단체의 활동, 조선인 스스로의 단체나 활동은 모두 봉쇄당하였다.

44) 國家報勳處, 『獨立運動史資料集』別集 第3輯, 223-224쪽.

#### 일제 강점하의 징용자 구술 ①

- 구술일시 : 2005. 8. 3. 14:00~15:30
- 구술장소 : 광양시 옥룡면 대방마을 회관(마을 정자)
- 구술자 : 송도호(宋道浩, 1923년생)
- 구술자약력 : 옥룡면 대방마을 출생. 왜정시대 강제 징용되어 사이판섬(태평양) 전투에 참여. 총상을 입고 미군에 포로로 잡혀 하와이 수용소에서 노역하다 해방이 되어 귀향함.
- 면담자 :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본 원고는 집필위원 원고와는 별도로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조사·게재한 것임.

- 면담자 : 몸도 불편하신데 구술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떻게 징용당하셨습니까?
- 구술자 : 왜정시대 말기로 1943년 11월 초순경 태평양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무렵에 당시 경찰서와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 강제 징용 당했지. 그래서 전남 여수에서 집결하여 군함에 승선, 부산에 도착하여 곧바로 일본국 하관 군항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하관에서 요코스카 해군본부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3주동안 각종 군사훈련을 받고 2일간 휴식을 취한 뒤 태평양의 사이판 섬까지 21시간 군함으로 이동, 거기서 최전선인 태평양

의 베니양섬 전선에서 약 4~5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에 임했지.

- 면담자: 사이판(베니양)섬이 전략상 어떤 곳이었습니까?
- 구술자: 일본이나 미국에게 모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야. 즉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중요한 곳이야. 미국으로서는 먼 항로를 비행하고 오다 일본을 폭격하려면 이곳에서 내려 정비(기름 주유 등)를 하여야만 되는 지역이고, 일본으로서는 이 섬을 잃으면 일본열도가 공습당하는 전초기지가 되므로 아주 중요한 곳이야. 나중에 미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일본 장성들이 자결하여 죽었다고 들었어.
- 면담자: 당시 그 곳 상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구술자: 그곳 생활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혹했어. 나중에는 미국 군함에 의해 보급로가 차단되자 하루 한끼 먹고 버텼으니 고생이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풀뿌리를 캐어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미군 폭격때문에 나다닐수 없었고, 해안의 고기잡이도 미군함에 노출되어 나갈수 없어 꼼짝없이 죽는 수 밖에 없었지. 마지막으로 일본 비행기 12대가 미군 폭격기에 의해 파손되어 2대만 남았는데 그 뒷날 아침에 보니까 거대한 미군 군함들이 이 섬을 둘러싸게 되어 항복하게 되었지. 그 동안의 전투에서 많이 죽고 생존자가 전체의 20%정도 되었지.
- 면담자: 그 중에서 어르신이 살아남게 되었군요.
- 구술자: 미군 포로로 잡혔지. 목숨만 건졌어, 그러나 왼쪽 입술에서 목 뒤 언저리에 총상이 관통되었고 대퇴부에 총알이 스쳐갔으며 왼쪽 어깨 언저리와 오른쪽 다리에 파편이 박혔어, 나중에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지.
- 면담자: 포로로 잡힌 후 어떻게 되셨나요?
- 구술자: 미군 포로로 잡힌 후 하와이 포로수용소에서 약 1년 7개월 정도 있었는데 사탕수수밭에서 일했어. 그 당시는 고향에 영원히 못가는 줄 알았지. 해방되던 해 11월 달에 석방되었는데, 석방한 3일전에 그것을 알았지. 그곳 한국포로들이 약 3천여 명 있었는데 간부들끼리 모여서 의논한 것이 생존자 명단을 만들자는 의견이었어. 그래서 밤새도록 만들어 가리방으로 굶어 여러 부를 만들었지. 나중에 정부나 필요한 기관에 증거로

넘겨주려고 한 거야. 그래서 나도 한부 가지고 고향으로 왔지. 몇 년 전에 독립 기념관에서 복사하여 가져갔고, 광양시에서도 한부 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면담자: 그 당시 다치신 곳은 지금 괜찮은가요?
- 구술자: 아니야,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그동안 수술을 2차례 하여 파편을 빼내고 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시력장애, 신경통이 심해. 그래서 약으로 버티오고 있어. 자네가 알다시피 귀가 잘 안들려. 큰 소리로 말해야 돼.
- 면담자: 몸도 성치 못하시는데 구술에 응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완쾌하셔서 오랫동안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 일제 강점하의 징용자 구술 ②

- 구술일시: 2005. 8. 1. 16:00~17:30
- 구술장소: 광양시 진상면 이천마을 경로당
- 구술자: 정용현(鄭容鉉, 1928년생)
- 구술자 약력: 진상면 이천마을 출생. 왜정시대 18세의 어린 나이로 강제 징용되어 무보수로 일본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군함 수리공으로 강제 노역당하였음.
- 면담자: 광양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광호  
\*본 원고는 집필위원 원고와는 별도로 광양시지편찬위원회에서 조사·게재한 것임.

- 면담자: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 구술자: 십여 년 전에 상처하고, 아들은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므로 나 혼자 살고 있어. 보기는 멀쩡하지만 속병이 많아, 아프고 쭈시고 젊었을 때 고생한 후유증이 뭐.
- 면담자: 어떻게 하여 강제징용 당하셨습니까?
- 구술자: 1945. 1월달에 강제징용 당하였는데 면사무소에서 18세 이상된 사람을 차출했어. 그래서 옷 입은 채로 갔는데, 그때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라 왜놈들이 발악을 한 거야. 헌병 인솔하에 여수 부두에 가보니 100명쯤 모였지만, 우리가 제14기니깐 마지막 기로 간 것일거야. 여수에서 1박을 한 후 열차로 이송되어 요코하마 조선소 숙소로 도착·작업복으로 갈아입



고 노무자로 일했지.

- 면담자: 그곳 노역장 분위기와 대우는 어떠했습니까?
- 구술자: 거기 노무자는 4종류로 구분되는데 일본죄수, 미군포로, 일본인, 조선인으로 일본인과 조선인들 간에는 서로 대화가 허락되는데 일본죄수, 미군포로들과는 일체 접촉을 금했어. 그리고 북한사람들은 사무원으로 주로 근무했지. 그리고 밥을 주는데 반드시 그릇에 담기 전에 무게를 달아서 정량으로 주었고 점심은 죽을 주었어. 참 노예생활이었지, 보수는 생각도 못했고.
- 면담자: 당시 그곳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구술자: 거기서 3~4개월 동안 있었는데 가끔 미군 폭격기가 날아드는데 시가지 피해가 컸어. 조선소는 해변가에 있어서 처음에는 직접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 폭격하기 전에 반드시 뼈라를 뿌렸지. 그런데 뼈라내용에 폭격이 곧 있을테니 한국사람은 비켜라(숨어라)하는 내용이었어, 이승만이 한거야, 지금도 나는 이승만을 존경하지. 1945. 5. 29일 미군 폭격으로 요꼬하마 시내가 쑥대밭이 되었어. 조선소 숙소도 불타버려 항복일보 직전이었어.
- 면담자: 귀향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구술자: 1945. 8. 15일 광복 20여일 후에 귀향했는데, 이것도 이승만이 적극 서두른 것이라고 하드만, 요꼬하마 조선소에서 열차를 이용, 시모노세끼항에 도착, 이곳에서 귀국선을 타고 부산에 도착· 각 시도별로 집결한 후 각 시도 방면별 인솔자에 의해 열차로 대전으로 이동, 순천방면 열차를 타고 왔는데 대략 1주일정도 걸려 고향에 도착하였어.
- 면담자: 귀향후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 구술자: 귀향후 몇 년간은 악몽에 시달렸지. 무지막지한 노예생활과 전쟁의 폐허, 공포 현장등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 그 후 10여 년 전 상처를 하고 나서 적적함 등으로 한때는 참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 이제는 크게 아픈 곳은 없어. 그리고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타고 있어,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배려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 면담자 : 구술에 응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오랫동안 마음편히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집필 : 전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윤선자

### 제3절 일제하 광양인의 민족적 저항

#### 1. 일제 경제 침탈과 광양의 노동운동

##### 1) 농민운동

일제는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이 붕괴되면서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은 산미증식사업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은 조선을 식량공급의 전초기지로 삼는 정책이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증가에 초과하는 양이 빠져나감으로써,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태에 직면하였다.

일제는 자국내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일본인의 조선이민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인의 조선이민은 호남·경남·충남·경기·황해도 등에 집중되었다. 일본인은 자국 농지가격의 1/10~1/20에 불과한 조선의 농지를 닥치는 대로 확보해 갔다. 그들은 소작료 수탈과 고리대 등 조선인의 희생을 동반시키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1910~1918년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세원(稅源)의 확보와 일본인 토지소유의 제도적·법적 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어 농민의 토지소유권이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농민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자본주의적 착취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더우기 반봉건적 지주·소작관계는 이중, 삼중의 착취 속에 몰락해 갔다. 농사개량 강제, 육지면 채배 강제, 뽕나무 묘목의 강제 보급, 수리조합 사업의 강행 등의 일제 농업정책은 농민의 현금지출을 증대시키고 추가노동을 강요하여 농민의 경영과 생활을 압박하



일제는 자국내 농촌의 과잉인구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일본인의 조선이민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본인의 조선이민은 호남·경남·충남·경기·황해도 등에 집중되었다.